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2023. 12. 14(목).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주최: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 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외 89개 단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천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준)세종사회적경제연대, 세상만사, 한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전국학교(사협)연합회, 시민발전이중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센터,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성공회대학교_사회적기업연구센터, 밴드, 경기제일신협, 경동신협, 서울행복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빠띠, 장안신협, 주민신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재단, 한국마을연합, (준)통합돌봄(사협), 가슴기살균제피해자단체, 천안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시민발전협동조합, 살림, 신나는조합,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나무,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춘천사회적경제협의회, 영월사회적경제협의회, 광진구사회적경제협의회, 옥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칼폴라니연구소, 인라이프케어이중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경제활성화 충북네트워크, 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협마을살림공작소, 서울도시재생기업협의회(준), 광주의료복지(사협),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연대회의, 로컬프루이중협동조합연합회, 건강한의료복지(사협), 시흥희망의료복지(사협), 강원의료복지(사협), 전주의료복지(사협), 인천평화의료복지(사협), 느티나무의료복지(사협), 살림의료복지(사협), 안산의료복지(사협),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협). 충북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13기.

목 차

여는 말 및 주최 국회의원 소개	이승석 상임대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진선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2 3
진행 순서		4
예산 증감 현황 및 문제점		5
배경 및 개요		7
활동 보고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중앙 활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지역 활동: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충북 국회활동: 구슬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보좌관	8 9 18 21 25 30
향후 과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_ 공대위 기획국	32
부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제안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 토론회 및 공동행동 제안(초) 주요 요구안 및 활동자료	45 46 47 49

여는말



상임대표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세 밑의 감회야 늘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일부 언론을 통해 내년도 사회적경제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개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전례가 없었던, 참담한 수준의 삭감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십수년간 사회적경제가 이루어 온 다양한 성과들은 무참하게 폄해되었고, 심지어 부정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공공이 실패하고 시장이 외면해온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기후,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우리가 이루어왔던 지난 십수년간의 성과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분노했습니다.

9월에는 공대위 구성을 결의하고, 10월에는 89개 단체가 모여 국회에서 공식적인 출범을 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하신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여명이 넘는 각당의 상임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독려하고, SNS 등을 통해 활동상황을 공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활동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진선미 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장

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호주제 위헌소송변호인단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인단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원위원장

전) 제7대 여성가족부 장관

전) 국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2023~24)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등 역임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영화 '어른이 되면' 감독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수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 수상

YMCA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

2021년 타임지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선정

전) 비영리재단법인 와글 사무국장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청년선거대책본부장,
혁신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역임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

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2023~24)

전)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진행 순서

사회: 윤봉란 위원장

시간	세부내용
10:00~10:20	준비 및 접수
10:20~10:30	안내
10:30~10:50	개회 및 기념촬영
10:50~11:15	<p><공동대책위원회 준비 과정 및 민간 활동> 연대회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중앙협의체: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지역: 송승민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세상만사(사협) 팀장</p>
11:15~11:22	<p><국회 활동> 진선미 의원실, 구슬기 보좌관</p>
11:22~11:35	<p><향후 과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공대위 기획국)</p>
11:35~11:50	종합토론 및 마무리
11:50~12:00	정리

□ 2024년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한 증감 현황

○ 23년 예산(1,118,351) → 24년 예산(479,966) / 삭감규모 및 비율: -634,585(56.7%)

(단위: 백만원)

증양부처	사업명	부문	2023 (A)	2024 (B)	증감 (B-A)	증감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금융	150,000	0	-150,000	-100%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금융	10,000	0	-10,000	-100%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금융	300,800	0	-300,800	-100%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비금융	7,500	780	-6,720	-90%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비금융	500	0	-500	-100%
과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비금융	1,272	636	-636	-50%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	비금융	6,995	2,695	-4,300	-61%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비금융	3,500	0	-3,500	-100%
문체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비금융	6,968	0	-6,968	-100%
	문화재 사회적 기업 육성	비금융	0	500	500	신규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비금융	5,900	0	-5,900	-100%
	농업농촌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비금융	900	0	-900	-100%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공급 기반조성	비금융	900	0	900	-100%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비금융	650	0	-650	-100%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비금융	3,900	0	-3,900	-100%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비금융	4,000	0	-4,000	-100%
산업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비금융	21,000	9,440	-11,560	-55%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비금융	2,560	2,560	0	0%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비금융	12,600	12,600	0	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비금융	4,851	4,851	0	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수지차보조)	비금융	17,031	16,480	-551	-3%
	소셜벤처 육성	비금융	2,000	0	0	-100%
	소셜임팩트 보증	금융	265,800	265,800	0	0%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금융	70,000	70,000	0	0%
환경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융	15,000	15,000	0	0%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비금융	1,300	0	-1,300	-100%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비금융	93,880	28,589	-65,291	-70%
	사회적기업육성(지특)	비금융	103,377	47,665	-55,712	-54%
	사회적기업육성(제주)	비금융	4,937	2,370	-2,567	-52%
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지원	비금융	230	0	-230	-100%
합계			1,118,351	479,966	-634,585	-56.7%

□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문제점

- 사회적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의 2024년 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대폭 삭감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부 처	내 용
고용 노동부	○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23년 2,022억원 24년 786억원 59% 삭감 - 지원기관 운영예산 23년 42.2억 24년 전액삭감 -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 23년 411.9억 24년 46.7억원 88.7% 삭감
기획 재정부	○ 협동조합활성화 등 예산 23년 79.6억원 24년 7.8억 91% 삭감 ○ 민간참여가 확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중기부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집중 지원 25.7억원 24년 전액삭감
산자부	○ 사회적경제혁신성장 23년 210억원 24년 94.4억원
복지부	○ 모든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자활기업 지원에 대한 별도 항목이 없었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활기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혁신, 본체는 ‘시장화’, ‘산업화’임
행안부	○ 23년 예산 70억원에서 24년 예산 27억원으로 59.7% 삭감 - 신규마을기업 육성 전액 삭감 및 우수마을기업 발굴·육성 전액 삭감

첫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붕괴

-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63,034명으로 이중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8,597명(61.2%)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예산 5,624억여원 중 정부가 문제 삼는 부정수급 사례는 71곳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1.1%이며 수금액 23억원은 전체 지원금 예산의 0.4%에 불과
- 한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10.7% 정도에 불과하고 89.3%는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둘째, 신뢰보호원칙 위반, 시스템 붕괴

- 정부의 정책은 예상 가능해야 함.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은 정부의 정책이 기대 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임.
- 만약, 현재와 같이 24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간 구축한 지원 시스템이 붕괴되며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고, 인적 자원의 유출은 단기간 회복 불가

셋째, 정부 발표는 기존 정부 발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사회적경제 지원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언급은 이미 정부의 수차례 발표한 자료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한편, 정부의 예산삭감은 ILO는 제110차 총회 및 UN 제66차 총회 결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권고한 것에 정부가 서명한 것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행위

배경 및 개요

□ 배경 및 필요

- 각 부처 발표에 의하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의 취약계층은 2만7천8백명('20), 3만8천6백명('21), 1만7백명('21)으로 3개 부처 만해도 7만8천3백명임. 그 비율도 협동조합은 57.9%, 사회적기업은 61.2%에 달하며, 소셜벤처('20. 8월)는 30대 이하 근로자 45.7%, 44.1%는 취약계층임.
- 즉 정부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월급'을 준 것은 정부의 역할인 취약계층의 생산적복지를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했기 때문임.
- 이러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10수년 동안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과 민간 기반의 전달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으로 직원 '월급'을 준다면, 사회적기업가나 사회적경제인을 '무능' '무책임'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2024년 예산 편성안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을 6천3백억 삭감함.
- 그로인해 취약계층 일자리와 열악한 조건에서도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한편, 국회에서 합의 통과시킨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올 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을 무력화하려 함.
- 사회적경제계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며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키고자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을 90개 단체 4백 여명이 국회에 모여 10월에 출범함.
 - 노동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된 중간지원 활동가 일자리, 이들을 통해 그 동안 구축해 온 사회안전망
 - 국회가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 무력화 저지 등
- 이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계가 반정부 투쟁을 한 것임.
- 그 동안의 민간과 국회 활동을 보고 정리하며 그 의미를 돌아보고자 함.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한 발전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4일 10:00~ 12:00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 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
- 공동주최: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 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보고

I. 중앙 활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_ 하재찬 상임이사

전국협동조합협의회 _ 김대훈 사무총장

II. 지역 활동

대전 _송승민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세상만사 사회적협동조합 팀장

1. 중앙 활동 _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하재찬 상임이사

□ 공대위 출범 과정

- 22년 기재부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축소 통폐합 <사회적경제과 + 협동조합과 = 지속가능경제과>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성명서 및 국회기자회견 등 진행
 - ↳ 정부의 예산삭감 등 사회적경제 지우기의 순서로 인식하여 예산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이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산삭감 등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함.
- 23년 4월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 ↳ 22년과 23년 예산 분석 및 정책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24년 예산 분석 계획 수립
- 23년 5월 기재부 및 고용부 등 주요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삭감 감지에 따른 감시
 - ↳ 국회 각 상임위의 사회적경제 관련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17개 부처의 예산 분석 등 예산안 감시
 - ↳ 전국협 등 주요 현장 협의체에서 기재부, 고용부 등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문의 및 확인

<2023년 기재부 1차관 및 부총리 협동조합 예산 관련 답변>

(5월 임시국회, 1차관)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예산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3천억이 좀 넘는 데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련해서는 그동안도 기재부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 6~7월: 지원기관전국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주요 협의회, 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참여 국회의원 등을 통해 큰 폭의 예산 삭감 가능성 인지.

>>> 6월 2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고용부의 예산삭감 1차 통보 사실 진흥원 노조 밝힘.

- ↳ 국회의원실 및 주요협의체 등을 통해 예산 삭감 규모에 대한 Cross Check
 -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원기관전국협의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이와 함께 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안을 확인 노력함.
 - : 정부가 강력한 엠바고를 걸고 있음과 함께 상상초월 예산삭감이 예상된다는 것을 확인
- ↳ 연대회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 필요 공감
 - 정부안 발표 전 성명서 발표를 통한 현장의 강력한 우려 표명
 - 이사회 및 대표자 회의 소집 필요 확인
 - 진흥원장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8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 진행

>>> 8월 17일 진흥원으로 고용부 58.7%, 협동조합 91.0% 삭감(안) 통보 사실 진흥원 노조 밝힘.

- 연대회의 공동대표단 진흥원장 면담
: 예산 대폭 삭감 및 재정지원, 육성사업 등 사회적기업 주요 예산 대폭 삭감 확인
- 8월 중순 성명서 초안 준비하여 대표자 논의를 통해 8월 말 발표

○ 9월: 정부안 확인 및 예산 평가, 그리고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평가

- 이사회 대표자 회의 제안 → 대표자회의를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추진 결정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표자회의 내용 및 결과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 및 지우기 대응방안 마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가동>>

- ➔ 공대위 참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함.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지 못 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 목표와 전략 속에 역할을 나누어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 ↳ 연대회의 회원은 참여를 기본으로 하나 열린 참여가 가능하며, 한기협/창업주체/지원조직 등 공대위에 꼭 참여하여야 할 주체들과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소통 필요
 - ↳ 개인/조직/협업체, 연대회의 회원 여부와 관계없는 폭넓은 참여 및 소외되지 않는 역할 필요
- ➔ 정책적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하며, 국회가 정치적 대응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 ↳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책에 대한 평가
: 국제토론회 및 다양한 토론회나 포럼 진행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 평가 실시 등
 - ↳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며 그 근거와 명분 제시
* 국회 및 정부(부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드러낼 전략과 그렇지 않은 전략 고려
- ➔ 일자리를 잃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목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 ↳ 아래와 같은 단계별 목표와 영역을 구체화하여 단단한 논리구조를 가진 대응



- : 국회 심의_ 국회 각 상임위(예결산소위원회) 논의와 국감(10월)을 거쳐 예결산위원회에서 확정
* 각 상임위 예결산소위원회 대응 → 국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거론 → 삭감된 예산 재편성 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복구(사회적경제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 예산편성안 복구와 이것을 넘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 ↳ 예산편성안 복구의 성패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성숙하고 단단해지도록 해야 함.

→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최대목표:

- 최소목표: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 대응활동 대상 및 단계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논리구조와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한 사회적 성과 제시 및 대응 논리 마련

- ↳ 사경 내부 이해관계자(참여 주민, 노동자, 조합원 등)와 일반 시민, 국회, 정부로 나누어 대응

- ↳ 개인에서 연대체까지 각 층위별 역할 및 개인(1인 시위 및 캠페인 등)에서 총괄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그리고 ILO/ICA 등과의 국제연대 등 대응활동의 폭을 최대로 확장하여 고려

→ 개인에서 국제연대까지, 개별에서 전국까지 대응 스펙트럼을 최대로 확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 국제연대까지 고려한 사회적경제 계 내부의 공동대응

- ↳ 사회적경제를 넘어 시민사회, 복지 및 자원봉사계 등과의 폭넓은 연대 대응

- ※ 국유재산 매각은 사회적 활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으로 시민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일 수 있음.

<참고> “나라땅 18~23% 싸게 팔렸다”... 16조 국유재산 또 헐값 매각 될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154.html

→ 연대회의의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업종/유형·부문> 등 10명 내외의 실행조직 둔다.

→ 공대위 출범을 위한 향후 단계 및 과제: 명칭 및 구성, 구성을 위한 제안문과 소통과정 필요. 실행위원회 구성 등의 출범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으며 연대회의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진행하고자 함.

<중요 논의 내용>

- 그 동안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간지원체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우려가 있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중간지원체계 필요.

- 지방정부의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안으로 진행할 경우 폐쇄되는 부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행정 공무원과의 협력 지점이 있음.

- * 일부 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함.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자활 등으로 지금의 정부 압박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부채 해결을 위해 예산 삭감에서 (자활)기금 환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진선미 의원실(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미팅 제안: 9월 7일 진행
: 예산 편성안 해결을 위한 논의 및 21대 국회에서 정리할 법안 등 제도개선 과제 제시
- 서삼석 예결위원장 면담: 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참석
: 예산을 조정할 때 명분도 있고 논의 안건 상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 상임위(예결산 소위)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복구 관련 언급과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함
- 효과적인 국감 준비를 위한 참고인 세우기 진행: 통합지원기관 및 한기협 등과 협력 중
: 기재위(진선미 의원)_통합지원기관에서 참고인 참여 신청, 환노위(이학영 의원)_연대회의의 하재찬 참여 신청

- : 환노위(이수진 간사 or 박정 위원장)_고진석 대표 참고인 세우기 노력 중
- 9월 18일 사회적기업 성과 토론회 긴급 진행(한기협) 고려 22일 국회 토론회 기조 변경
- 9월 19일 예산편성 관련 활동 요청
 - : 추석 전까지 각 상임위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각 영역별 해당 상임위 예결소위 위원 및 상임위 위원 면담 필요.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 추석 전 대략적인 국감 전략을 각 의원실에서 수립한다고 함. 사회적경제는 연대회의에서 국감이 필요한 것을 수집하하고, 22일 토론회 내용과 금요일까지 수집된 것을 사회적경제 관련 의원들과 협력하려고 함.
 - ^ 국감 내용이 있으면 간단한 근거와 함께 최대한 빨리 최소 금주 중으로 요청
- 9월 22일 국회토론회 진행
 - :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공동대책위원회 제안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616>
 - : 사회적경제 관련자 '92%' 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부정적' 평가
 -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5>
 -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민생예산"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하라"
 -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6140>
 - : 사회적경제, 국민통합 이뤘나 대표정책, 예산축소 우려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90>
 - : 현장소통도 없이 정부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9967.html
- 9월 25일 공동대책위원회 추진을 위한 준비회의 진행
 - : 10월 17일(14시) 또는 18일(14시) 중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기로 하며 공대위 참여 제안서 및 기획안을 범 사회적경제계에 제안하기로 함.
 - 공대위 출범에 대하여 한번 더 신중히 토론하며 공대위 추진에 다시 한번 모두 동의함.

공동대책위원회 제안설명 및 준비회의 결과

- 9월 19일 연대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를 화상으로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안 설명을 진행함. 아래와 같이 논의 및 협의하였고 9월 23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 강원 및 원주/춘천/영월, 대전, 세종, 충북 및 청주, 충남 및 천안, 제주, 전북, 서울 및 광진, 광주, 안산, 자활기업, 광역 권역별 지원기관협, 전국협, 한마협, 활성화네트워크, 시민발전, 생협 등을 포함한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들 40명 정도 함께 함.

<주요 논의 및 협의내용>

-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이라 함은... ① 지금의 문제에 대한 영향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사회적경제를 지우고자 하는 의도를 막기 위한 활동으로서 함께 해야 함. ② 공대위 참여여부를 떠나 전선을 명확히 하여 대응 활동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해야 함. 내부적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대응 활동이 정리된 이후해도 늦지 않음.

- 전국적인 규모로 공대위가 활동하고 있음을 조직도에서 드러내는 것 중요
 - : 중앙 = 광역 = 기초 = 개별 조직과 개인
 - : 이와 더불어 10월 초와 10월말이나 11월 초에 대규모 집회가 연결되어 진행되어야 함.
 - : 개인활동을 다양하고 폭넓게 하도록 활동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함.
- 우리 목표를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시민과 사회적경제 내 우리 노동자와 조합원이 쉽게 이해 하도록 하는 공대위 명칭과 슬로건이 필요함.
- 총선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함. 지역 언론 연계와 지역 여/야 시도당 압박 등
- 공대위 발족 전이라도 사회적경제인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로 실행해야 함.
- 활동이나 데이터가 쉽게 공유되고 모아질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활동해야 함.
 - : 연대회의 차원에서 빠띠 믹스를 다음 주 부족하더라도 오픈하고자 준비 중
- 실행위원회와 실무단 구성이 중요하며 오늘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 실행위원회와 실무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됨.
- 대응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함. ← 연대회의 차원에서 계좌 공유 필요
- 진흥원이 예산편성안과 관련하여 부처를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후라도 강력히 평가해야 함.

<23일 20시 진행하기로 한 차기회의 주요 안건>

- 각 주체별 참여 및 공대위 조직구성, 그리고 주요 행동과 일정 등

□ 9월 23일 준비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하기로 함.

공대위 활동의 핵심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 지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사회적경제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예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예산 원상복구>를 명칭에서 명확히 드러내며 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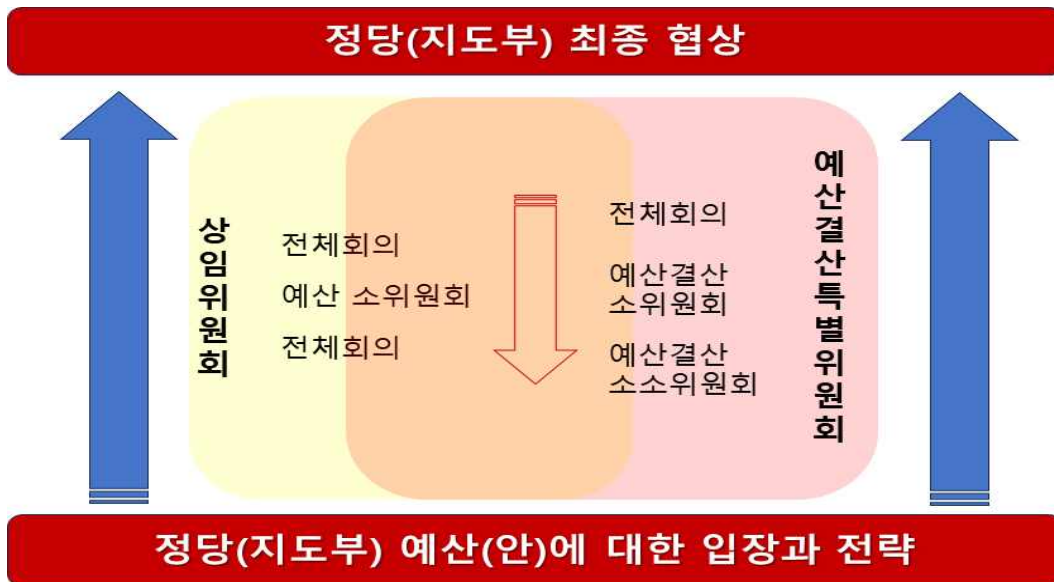
1. 명칭: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을 명칭에서 제외하되 운영 원칙으로 세우고 활동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함.
2. 목표: 예산 원상복구 & 사회적경제 연대 및 조직력 강화
3. 조직: 행동과 실행에 초점을 둔 구성과 운영 필요
 - ▶ 공동대표단 → 실행위원회 → [기획국 + 홍보국 + 투쟁국]
 - 공동대표단: 효과적인 논의를 위한 구성과 범위 고려 필요
 - 실행위원회: 각 국장 및 연대회의 집행위원회 등 참여
 - 3개 국: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 및 연대회의 집행위원회 제안 등으로 구성
4. 공대위 출범: 10월 17일 또는 18일 중 국회본청앞 계단에서 14시에 진행
 - 공대위 조직 시간 및 국감 초기이자 예결위 전으로 이 때가 적당한 시기로 판단됨.
 - 국회의원 협조가 필요함으로 행정적 절차와 국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이에 17일(14시) 또는 18일(14시) 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선호하는 날짜로 잡고, 국회 사정상 17일이나 18일 중 정해진 날에 하여야 하면 그 날로 진행하기로 함.
 - * 공지사항에 내일(27일) 저녁까지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본청 300명 이상 참여가 보장되어야 유효한 출범식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참여 필요함.

>>> 준비회의에서 정한 것을 공대위 단독 'SE로운 길 열기'에 참여한 주체 및 연대회의 대표자 단
 독에 공유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함. 두 단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안자로 하여 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제안함.

- 10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공개적인 대응활동 진행
 - 10월 10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제안
 - : 10월 18일 15시 국회본청 계단에서 대 규모 출범식 진행 및 공대위 제안서 발송
 - : 출범식 준비를 위한 공대위 전체회의 10월 16일 진행
 - 10월 18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진행
 -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 위성곤/김영배/민형배 의원
 참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 참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참석

□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대응 활동

- 국회내 예산 확정 프로세스



- 정당(지도부) 면담: **정당의 예산 전략은 9월 말 10월 초 확정**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홍익표 원내대표: 공대위 출범식 참석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발언 및 민주당 공식회
 이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 진선미 의원(실) & 공대위 차원에서 보좌진과 적극적인 소통
 - 이개호 정책위의장: 생협과의 인연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생예산인 사
 회적경제 예산 복구에 적극 고려 의사 표명, 보좌관과 간헐적 소통 진행
 -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9월 연대회의 중재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통합지원

기관전국협의회가 함께 면담을 진행하여, 예산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대응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서면)질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과 민주당의 협상안이 정리될 때 상위에 배치되도록 하는 것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 올 경우 챙겨 보겠다고 함.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전 사회적경제 관련 (서면)질의 현황 조사 등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함.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공대위 차원에서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시민사회 쪽 삭감 예산을 하나의 요구 안으로 묶어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민주당 요구. 패키지 차원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차원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 요청 진행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 **유의동 정책위의장:** 약 1시간 정도의 성의있는 소통 진행. 삭감의 심각성 인식,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복원노력 약속. 보좌진과 간헐적 소통 진행
- **윤재옥 원내대표...** 공문 및 수업는 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 및 보좌진 소통도 못 함.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토론회 및 공동행동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활동

- ▶ 10월 4일? 구도 제안
- ▶ 10월 24일?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에 공식 문건 제안
- ▶ 11월 2일 시민사회 간담회
- ▶ 11월 14일 박주민 간담회
- ➔ 10월 초 당 차원에서 예산 대응 전략이 수립되었고, 11월 초에 상임위 차원의 예산 논의가 진행된 상태여서 패키지 차원의 대응 불가
- ➔ 당 차원(수석부대표)에서 해당 상임위에 추가 논의가 진행될 시 고려해 줄 것으로 각 주체별 요구안을 바탕으로 상임위 간사 및 위원장에게 요청

○ **상임위원회 예산 편성안 심의**

전체회의 안건 논의 및 질의

➔ 예산소위원회 심의

➔ 전체회의 상임위 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달

▣ **상임위별 소통 의원(실)**

상임위원회	소통 진행 의원	비고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이수진(비례) 간사,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_예산소위 간사, ➔ 공대위 차원에서 주요 요구 사항 관련 (서면)질의 진행	초기 한기협 단일 소통 후 공대위 소통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김태년, 정태호_예산소위 간사, 박광온, 정의당 장혜영 _예산결산위원, 국힘 송언석_예산결산위 간사, 국힘 김영선, ➔ 공대위 차원에서 주요 요구 사항 관련 (서면)질의 진행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_예산결산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 현장 소통(대응) 부족으로 (서면)질의 여부 확인 불가	현장 소통 부족
농림수산위원회	위성곤_예산결산위원, 국힘 이달곤_예산결산위원	실질적 현장 이슈 無

상임위원회	소통 진행 의원	비고
산자위	이용빈_예산결산위원, 김정호, 박영순,	대응 주체不在
중소벤처위	공대위와 현장 주체 간 소통하여 예산 대응을 현장이 별도로 진행하기로 함.	
교육위원회	도종환_예산결산개수위원, 김영호_예산결산위원 → 현장 소통(대응) 부족으로 (서면)질의 여부 확인 불가	현장 소통 부족
보건복지위	국힘 강기윤, 정의당 강은미,	실질적 현장 이슈 無
예산결산위원회	기동민_예산결산개수위원, 김승원, 강훈식, 조승래, 홍기원, 김병욱, 김수흥, 허영_예산결산개수위원, 박상혁,	서면질의 및 협상 대응

※ 박주민_민주당 수석부대표, 박범계, 김영배, 민형배, 황운하

- **환경노동위원회:** 박정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소통, 대응 초기 민주당 내 사업개발비 중심의 협상으로 가이드라인 형성된 측면이 있었음. 이후 공대위 소통 개입하여 일자리 중심의 논의로 강력하게 진행. 이수진(비례) 간사에 의해 공대위 논의가 논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구두 및 서면 질의, 사회적경제 현장 진출인(하재찬 상임이사) 요구도 진행되었으나 국힘 반대로 진행되지 못 함.

※ 진흥원장이 민주당 예산 인상 요구안과 국민의힘의 반대가 작용하여 사업개발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가이드라인 형성된 것으로 예상함.

-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실) 중심으로 적극적인 구두 질의 및 서면 질의가 이루어졌고, 김태년, 박광온, 정태호 등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짐. 정의당 장혜영, 국힘 김영선 의원은 전국협에서 대응하였고, 국힘 송언석 의원은 공대위에서 대응하였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구두 및 서면 질의가 진행되었고, 사회적경제 현장 진출인 요구도 진행되었으나 진행되지 못 함.
-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에서 민주당 이형석 의원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이어 받아 공대위 차원에서도 마을기업 서면질의가 들어올 경우 협력을 약속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서면질의 등 협력을 약속함. 공대위 차원에서 마을기업 쪽과 소통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함.
- **교육위원회:** 충북지역과 협력하여 공대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해 주었고, 이것에 보태어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서면질의도 진행함. 도종환 & 김영호 의원 모두 학교협동조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협력하려고 하였으나 현장 주체와 공대위 차원의 소통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 함.

○ 예산결산위원회

-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했던 서면질의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짐
- 예산결산소위원회(개수위원회)
 - 협상안과 목표안을 설정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을 민주당(도종환 의원 외)과 진행함.
 - 그러나 협상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하지 못 함.

※ 진흥원 & 한기협 요구안이 매우 낮은 수준의 협상안으로 협상 메시지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장 소통 및 간접비 관련 예산 요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

- 정부예산안(세부항목)에 따른 우리 요구안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예산 증액 논의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안을 민주당과 마련함.
- 진선미 의원실을 중심으로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의원실과 논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을 위한 소통을 진행함.

>>> 핵심 요구안 부록 참조

□ 예산결산 소소위원회

- 각 당의 예산 협상안을 중심으로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세부적인 모니터링은 어려웠으나, 사회적경제 관련 민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음.

※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4인 협상으로 예산 협상 과정이 넘어왔고, 1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만 확인되고 있음.

※ 예산 복구의 중요 걸림돌: ❶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되어야 하나, 정부 예산이 예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수립되어 적극적인 삭감의 한계가 있음. ❷ 진흥원보다 빠르게 예산 대응을 하지 못 하여 국회(민주당)에 이종으로 요구됨.

□ 정리 및 소회

- 사회적경제계가 정부의 정책지우기에 대하여 투쟁한 첫 사례
-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심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한다>는 연대와 그 가능성을 확인함.
- 사회적경제계는 시민사회 주체 중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집단 대응을 함.
-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를 시민사회에 요구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예산 대응 후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 대응 논의를 진행할 예정
-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주요 주체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초기 국회(민주당)에 메시지(요구)의 혼란이 있었음.
- 공대위 차원에서의 예산 원상복구 대응은 적극적이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각 프로세스별 진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평가해 주고 있음. 진선미 의원실에서 프로세스별 필요 대응을 선 안내하기도 함. 단 국회에서의 예산 협상 논의 과정별 대응 시점을 보다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9월 중하순 예산에 대한 정당의 대응 방안이 수립됨

I . 중앙 활동 _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김대훈 사무총장



주요경과

2022년 3월 _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5월 _ 윤석열 정부 출범

-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실종
- 사회적경제 정책의 급격한 퇴보, 후퇴 예상
- 극히 일부 분야(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사회적경제 언급

2022년 12월 _ 사회적경제과 & 협동조합과 ->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통합

2023년 3월 _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 이전 기본계획 대비 협동조합 정책 소극화 & 주요 전략과제 퇴보, 실종
-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는 슬로건을 뒷받침할 미래 전략, 핵심 정책 실종 (자금조달 및 금융정책, 제도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촉진 등)
- 교육, 창업 정책에서 있어 당사자, 연합회의 역할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

2023년 9월 _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도적 부정적 평가

2023년 9월 _ 윤석열 정부 2024년 예산(안) 국회 제출

-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 예산을 통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력화 시도

대외협력과

2023년 3월 22일 _ 윤석열 정부 2년차,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 라이프인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기획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전문가 리뷰 연재 (7회)

2023년 7월 2일 _ 101th 세계 협동조합의 날 기념 포럼 개최
• 주제 :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상상협동행동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 간 협력의 사례와 임팩트"
• 주최 : 신탁중앙회, 사회연대경제전국지방정부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2023년 9월 6일 _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
• 윤석열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퇴보 및 2024년 예산 편성 관련 협동조합 현장의 의견 공개 및 정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과 공동주최

2023년 9월 6일 _ 협동조합 예산 91% 삭감과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력화에 대한 성명 발표

2023년 9월 27일 _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및 2024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회, 정부)

2023년 10월 _ 국정감사 대응 준비 (진선미 의원실과 긴밀히 공조)

2023년 10월 10일 _ 2023년 국정감사 대비 협동조합 분야 주요 국정감사 이슈 제출 (국회)

2023년 11월 2일 _ 2024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재편성(증액) 의견서 제출 (국회, 정부)

합동국정감사

2023년 9월 6일 정책토론회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장혜영 의원, 전 김진욱 보좌관-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조현수 보좌관)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협동조합 정책의 퇴보에 대한 지적 및 예산 대응 시작

2023년 10월 국정감사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진선미 의원, 구슬기 보좌관)
• 탁월한 정책분석을 통해 예산을 통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무력화에 대한 문제 제기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소위 : 소위원장 정태호 의원(김준하 보좌관), 김태년 의원(신동림 보좌관), 박광온 의원(김하림 보좌관) 등 면담 및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적극 대응

- 진선미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및 전국협 의견서, 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소위 적극 대응 요청
- 서면질의 제출 : 진선미 의원(진선미, 양경숙, 홍영표, 서영교) 및 정태호 의원
- 성과 : 김태년, 정태호, 박광온 의원 집중 질의 -> 차관, 국장, 과장 참석하여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력화의 문제점 일부 인정, 약 20억원(교육 및 판로 등)의 예산 증액의견 제시
- 결과 : 기획재정부가 약 20억원의 증액에 동의하였으나 더 많은 증액협상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고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특위로 넘김

국회 예결특위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서면질의 제출 (원상복구 의견)

- 서면질의 제출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예결특위 간사)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박재호, 양경숙, 이수진, 이용빈, 홍기원, 강훈식(예결특위 간사), 김승원, 허영(김용철 보좌관), 신동근, 이용우, 조응천) & 정의당 : 장혜영(조현수 보좌관)
- 현재 예결특위, 소위 과정을 거치고 소소위 차원의 예산 협상 과정 진행 중 (비공식, 비공개)

국회 예산 심의 절차 및 대응전략 자문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손낙구 보좌관) : 국회 예산심의 절차(비/공식) 및 대응 전략 자문

주요성과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근거로 2024년 협동조합 정책의 퇴보, 예산(안)의 문제 제기 및 공론화 (정책토론, 국정감사, 상임위, 예결특위)
- 국정감사 및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조직
-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 정의당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까지 협동조합 예산의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하는 서면질의 제출 (기재위, 예결특위)
-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 예산의 원상복구를 당 입장 및 예산 협상의 기본입장,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증액)협상 진행 중 (진선미 의원, 허영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원장, 강훈식 예결특위 간사)
- 12월 20일 2024년 예산(안) 본회의 상정 예정... 최종 결과는?

에필로그

- 2023년 한해 동안 여러가지 정책적, 제도적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 주문했습니다.
- 그러나 관심을 표명하고 관련 부처에 문제를 확인,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해보라는 답변과 소극적인 대처가 매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주무부처의 정책의지가 확연하게 퇴보하는 현상을 절감하고 또 재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 삭감된 예산의 복구는 최소한의 협동조합 생태계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최소한의 정책의지를 유지하고 되살려내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II. 지역활동 _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 송승민 세상만사 팀장



1. 활동목적과 방향

-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폐기의 문제점 알리기
- 사회혁신을 향한 사회적경제의 노력과 성과, 한계 성찰
-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통합연대의 필요성과 과제 설정

2. 활동계획



3. 활동내용

진행일정	활동내용	비고
사회적경제예산 삭감 대책마련 비상회의를 위한 제안 모임		일시 : 23년 10월 12일 장소 : 공간'이음' 내용 : 제4차 사회적경제기본계획안 및 예산삭감 현황공유, 전국 공대위 활동 및 지역공대위 결성 제안

진행일정	활동내용	비고
<p>전국 공대위 발대식 참석</p>		<p>일시 : 23년 10월 18일 장소 : 국회본청앞 내용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규탄 및 공대위 발대식 참석 : 대전사회적경제기업 및 단체, 지원기관 총 30명</p>
<p>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p>		<p>일시 : 23년 10월 19일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내용 : 정책축소와 예산삭감 상황공유와 대책수립 및 운영조직 논의(상황실 구성), 비상공동대책회의 결의문 낭독 참석 : 사회적경제주체 100여명</p>
<p>대전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의날</p>		<p>일시 : 23년 11월 21일 장소 : 대전시청북문앞 보라매공원 내용 : 사회적경제 대시민대상 홍보부스 운영, 사회적경제인 문화공연, 자유발언 및 대전공동체 연대발언,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결성 결의문낭독 참석 : 300여명의대전시민 및 관계자 ※ 축전 :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장철민 국회의원</p>
<p>사회적경제 大토론회</p>		<p>일시 : 23년 12월 14일 장소 : 대전NGO지원센터 내용 : 예산삭감 정채 비정상 문제 분석, 위기진단과 새로운 발전방향, 사회적경제토크쇼, 송년의밤 참석 : 온-오프라인 100여명</p>

※ 대전사회적경제비상회의 상황실운영(매주 1회 정기회의 진행)

※ 11월 2일(화) 1차 대전공동체비상회의 공동행동의날, 12월 5일(화) 2차 대전공동체비상회의 기자간담회 활동연계

※ 첨부1

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결성 결의문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 사회적경제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지역문제 해결사였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복지사각을 없애고, 환경문제에 혁신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켜온 중요한 주체였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편향된 시선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회적경제의 우수성을 홍보하던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지금은 무능, 무책임, 정부의존 등으로 매도하는 현실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정부가 직접 돌보지 못한 틈새까지 살피며 사회안정망을 보강해 왔던 사회적경제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공공가치 실현을 신념으로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등잔밑을 챙기며 녹녹치 않은 환경에서도 무너지는 지역을 세우고 있으며 공동체와 이웃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민생의 현장이다. 벼랑 앞의 버팀목인 사회적경제가 이와 같은 조롱과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치닫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우습게 본 지금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의 힘과 신념을 함께 모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즉시 정상화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산 복원에 나서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멈추고 모든 사회적경제인 앞에 사죄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각 자치구는 사회적경제의 혁신 성과를 인정하고, 실효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

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와 협력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경제가 만든 우수한 혁신성과에 대한 옳은 인식과 공감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와, 더 새롭고 더 이로운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2023년 10월 19일

사회적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전비상공동대책회의 참여자 일동

※ 첨부2

대전 사회적경제 공동행동 결의문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지난 20년간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해 왔다.
모두에게 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사각을 없애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사회적경제는 이념이 아니며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민생의 현장이다.

사회적경제가 이룩한 그간의 혁신 성과 앞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공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켜왔던 사회적경제인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치닫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우습게 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는 힘과 신념을 함께 모을 것이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즉시 정상화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산 복원에 나서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각 자치구는 사회적경제의 혁신 성과를 인정하고,
실효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

2023년 11월 21일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의날 참여자 일동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강원공동대책위원회 활동보고

2023.12.8. 강원사경연대 사무국

- 9월 9일. 강원사경한마당 행사 이후 강원도사회적경제긴급확대간담회 (원주시 기후변화교육관)
 -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 배재국 강원사경연대 공동대표 등 약 50여명 참석
 -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 SNS 의견게시 등 당장 가능한 일부부터 시작하자, 기존 연대조직을 포함해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책기구를 구성하자, 강원도비상대책기구(?) 첫 회의는 15일 원주에서 하되 각 시군,업종,부문별로 의견을 비상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아보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카톡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자.
 - 9월 10일. 강원공대위 오픈채팅방 개설. (139명)

- 9월 15일. 강원사경비상대책회의 (원주시 소셜캠퍼스온강원)
 - 강원사경연대, 영월군사경협, 원주협동사경네트, 춘천사경네트, 강릉협동사경네트, 강원사경센터 25명
 - 회의 참가 지역을 기본으로 공대위를 출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문자 발송, SNS 챌린지, 기업 피해 실태조사(84개 기업 참여) 등 행동과 통합지원기관 연서명 요청 등 참여 결정.
 - 9월 18일. 강원공대위 대표단 단톡방 개설. (13명)

- 9월 18일. 원주투데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중단... 취약계층 어찌나?"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55>

- 9월 25일. 원주투데이. "사회적기업 지원 중단 소식에 원주비대위 구성"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57>

- 9월 27일. 강원도민일보. "사회적경제 기업 예산 급감... 강원기업 존폐 기로" 기사 게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6163>

- 10월 10일. 원주투데이. "32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어디로?"(원주협동사경네트 이사장) 시평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71>

- 10월 16일. 원주투데이. “원주 사회적경제, 코로나 보릿고개 넘겼을까?”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03>
- 10월 17일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시갑) 면담신청
 - 국감일정 이유로 고사
- 10월 18일 전국공대위 출범식 참석
 - 28명 참석
- 10월 23일. 강원공대위 제작 카드뉴스(12장) 배포 (사회적기업 소박한풍경 후원)
- 10월 23일. 원주투데이. “‘구슬을 꿰는 5%’를 믿는다” 독자투고(길터사협 밤새라면 TF)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93>
- 11월 1일 원주투데이 시민토론회, “위기 직면한 원주 사회적경제 - 활성화방안 모색”
 - 발표 : 원주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원주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중단의 의미와 파장
- 11월 6일 원주투데이 “원주형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필요” 사설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11월 6일 원주투데이 “정부 재정지원 중단, 원주시가 완충 역할 해야” 기사 게재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07>
- 11월 20일 춘천KBS “사회적기업 예산 60% 삭감... “복지사각, 일자리 감소 우려” 보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2105>
- 11월 24일 강원공대위 워크숍 (원주시 상지대 벤처창업관), 사경활성화강원네트워크 후원
 - 9명 참석. 공대위 향후 활동방향 토론. 토론결과 별첨 #1
- 11월 26일 영동mbc 시사반장 “역대급 지방세수 결손 각종 예산 삭감 비상” 출연 (강사연 사무국장)
<https://www.mbceg.co.kr/post/111135>

별첨 #1

강원공대위 워크숍(23.11.24) 공대위 향후 활동방향 토론결과(요약)

- 연대회의 중심으로 예산관련공대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의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전반적으로 역량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
- 예산 문제를 넘어 제도/지원 의존성 등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과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
- 서울, 경기 등 지역별로 또는 한기협중앙회 등 부문별로 이해관계나 공감대에 차이가 존재. 연대회의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
- 강원도의 경우 시군 네트워크와 센터의 역할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정책 또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준비해야.
- 강원도 역시 리더십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시군네트워크도 활동 및 사업적인 정체성을 명료하게 정비해야.
- 당위나 대의만으로는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사업적인 필요가 조직되어야. 예를 들어, 강원사경연대의 경우 공제기반의 사회적금융사업이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서 실체가 인정되고 있음.
- 자활기업협회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구체적인 사업적 필요가 모아지고, 해결될 수 있어야 동력이 생긴다는 점.
- 사회적경제 내부에서 보호된 시장 등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 또는 사업연합체를 조직하는 방법이 필요.
- 초기 사회적기업가 중심으로 형성되었는 신뢰 자본,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졌음. 신뢰 자본을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전라북도 공대위 활동

- 10.10.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 결의』
- 10.14. 한병도 국회의원 간담회
- 10.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출범식』 참석
- 10.18. 현재 시군 사회적경제조직 순회 대응활동 홍보
- 10.21. 이원택 국회의원 간담회
- 10.23. 전북도의회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 발의
- 11.08.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 5분 발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구 및 전북의 역할 강화』
- 11.11. 김수홍 국회의원 간담회
- 12.12. 사회적경제 토론회 (전북도의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남 공대위 활동 : 사단법인 상생나무

- 10.13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참여 결의
- 10.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응위원회 출범식』 참석
- 10.26 상생나무 사회적경제 상생포럼 '정부정책 탐구 및 대응' 개최
정부정책 진단 및 여수형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집담회
- 10.27 김희재 국회의원(전남여수시울, 예결산위원회 위원) 간담회
- 11.07 사회적경제 10문 10답 페이스북 게시(상생나무, 여수사경센터)
- 11.10 서삼석 국회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 서면질의 송부

광주 공대위 활동 :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 09.14. 강은미 국회의원 간담회
- 09.22.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 10.10.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 대응 결의
- 10.13.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및 대응 방안 관련 집담회
- 10.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 대응위원회 출범식 참석

- 10.24. 사회적경제 예산 관련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간담회
- 10.27. 사회적경제 별별포럼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창출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국면 전환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 12.14. 2024사회적경제 전망 토론회 예정

충북 공대위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 09. 19 공대위 추진을 위한 연대회의 회의 결과 및 협의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제안
- 09. 22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참석 및 내용 공유
- 09. 25 협의회 대표자회의_예산삭감 대응 방안 및 공대위 참여 논의
- 09. 26 공대위 추진 2차 회의 결과 및 참여 제안서 초안 공유
공대위 출범식 일정 및 활동계획 제안
- 10. 10 공대위 참여를 위한 부문별 참여의사 확인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공대위 참여 결정
- 10. 12 충북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사회적경제인의 날 성과포럼 개최
- 10. 16 공대위 전체회의 참석, 회의내용 공유와 출범식 조직 현황 및 참석자 파악
공대위 활동기금 참여제안 : 특별회비 추렴 결의
- 10. 18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10. 31 공대위 확대 실행위 참석 및 결과 공유
예결위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 대응 활동 논의
- 11. 07 사회적경제 예산 10문10답 공유 및 배포
- 11. 07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 의원실 보좌진을 통한 예산 원상복구 협조 요청
- 11. 18 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 면담
- 12. 14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참석
- 12. 20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확대회의
공대위 활동보고회 결과 공유
부문 및 지역별 현황 공유
2024년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및 충북사회적경제 활동 방향 논의



국회활동



구슬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보좌관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보고회 <국회 활동>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부 2022년 결산안 심사(8.22)
 - 전체회의 전날인 8월 21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1% 삭감 인지
- 2024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9.1)
-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삭감 평가(9.22)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설립 및 출범식(10.18)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10.1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심사(11.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소위 심사(11.8~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의결(11.13)

IV. 특이사항

가.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중 2023년 대비 약 67억원 감액 편성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동의 가능한 수준(교육 및 판로지원 등 19억 6천억원)의 증액 또는 정부 원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1.1~1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11.11~11.26)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11.27~12.2)
- 4인회(12.11~)



향후과제



공동대책위원회 기획국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대위 보고회 발표자료>

사회적경제 정책현황과 전환을 위한 연대와 협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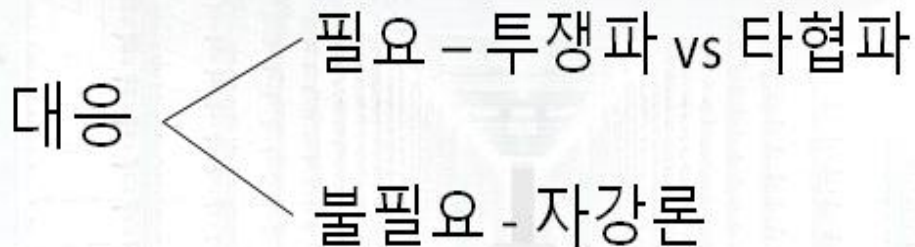
윤석열정부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

01

I. 사회적경제 정책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 현 상황을 대하는 민간의 입장



입장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고 이 변화(정책 퇴조기)에 사회적경제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시점임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축소에 맞서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

○ 사회적경제예산삭감의 문제점

첫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이 붕괴 됩니다.

-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63,034명으로 이중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8,597명(61.2%)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예산 5,624억여원중 정부가 문제 삼는 부정수급 사례는 71곳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중 1.1%이며 수금액 23억원은 전체 지원금 예산의 0.4%에 불과

- 한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10.7% 정도에 불과하고 89.3%는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둘째, 신뢰보호원칙 위반, 시스템 붕괴

- 정부의 정책은 예상 가능해야 함.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은 정부의 정책이 기대 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함

- 만약, 현재와 같이 24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회적경제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 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간 구축한 지원 시스템이 붕괴되며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고, 인적 자원의 유출은 단기간 회복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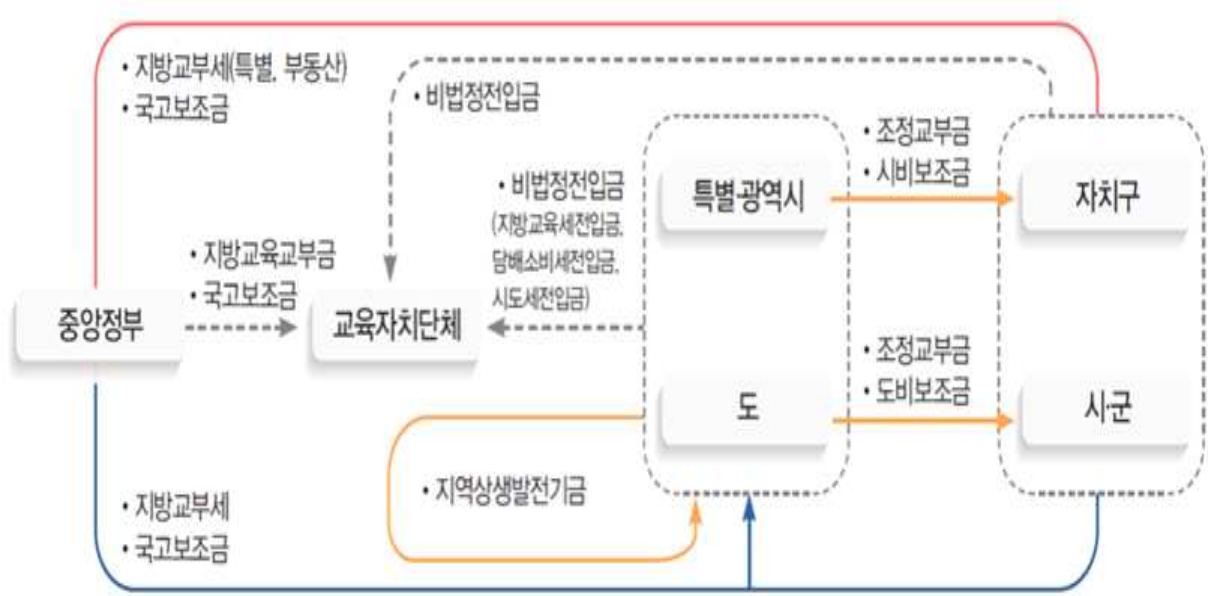
셋째, 정부 발표는 기존 정부 발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사회적경제지원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언급은 이미 정부의 수차례 발표한 자료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한편, 정부의 이번 예산삭감은 ILO는 제110차 총회 및 UN 제66차 총회 결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권고한 것에 서명한 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 되는 행위

윤석열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자차단체 재정구조



24년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66조 8천 억 원으로 올해(2023년 본예산 기준)에 견줘 8조 5천 억 원(11.3%) 감소. 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도 올해보다 6조 9천 억 원(9.1%) 감소한 68조 9천 억 원

24년 감액 규모는 15조 4천 억 원(10.2%)에 이릅니다

사회적가치 대분류를 삭제하고, 경영관리 및 경영성파로 통합 → 사회적가치개념의 후퇴

< 기존(2022년 편람) >

< 변경(2024년 편람)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지속가능 경영 (26)	리더십 (15)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경영시스템 (11)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37) (*23년 통합)	일자리 확대(8)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소통 및 참여
	사회적 책임 (29)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경영성과 (37)	주요사업 (17점 내외)	주요사업 세부 지표
	경영효율성과 (12점 내외)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관리 (26→50) * 사회적 가치(37) 통합·조정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12)
	경영시스템 (19)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책임 (19)	사회적 책임	지역상생발전
		인선 및 환경
		소통 및 참여
경영성과 (37→50) * 정부정책 이행성과 별도관리	주요사업성과 (17점 내외)	주요사업 세부 지표 * 맞춤형 지표 추가
	경영효율성과 (15점 내외)	경영수지 관련 지표
	고객만족성과 (8)	고객만족도
	정책이행성과 (10)	정부정책 이행실적

* 2022. 12. 19. 발표자료. 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련 지표)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래네트워크 구조]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래네트워크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 음식료품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 산업 간 거래 네트워크에서의 핵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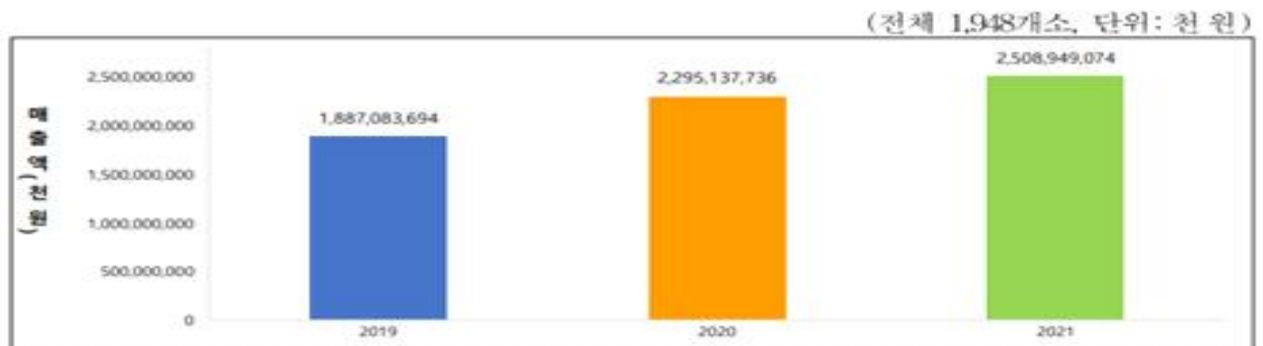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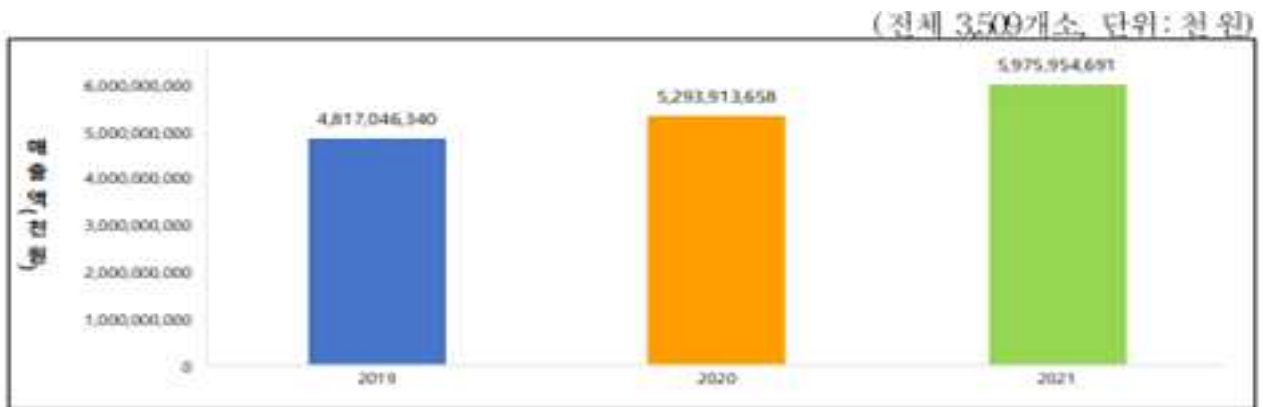
- '지방행정 집행기관'의 중심성이 가장 높음
 - 공공구매
- 농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 산업 중심으로 농협, 농업회사 법인, 영농회사법인 등과 거래가 강함
- 그 외 거래가 활발한 업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출판업
 - 개인 서비스업 등



<기업 간 메인 네트워크>

출처 : 2023 한국협동조합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사회적기업매출액과 공공시장 매출



사회적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볼 문제들

02

II.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장기



현 이슈가 정리되고 나면 남는 장기적 대응방향

02

II.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장기_아이디어 수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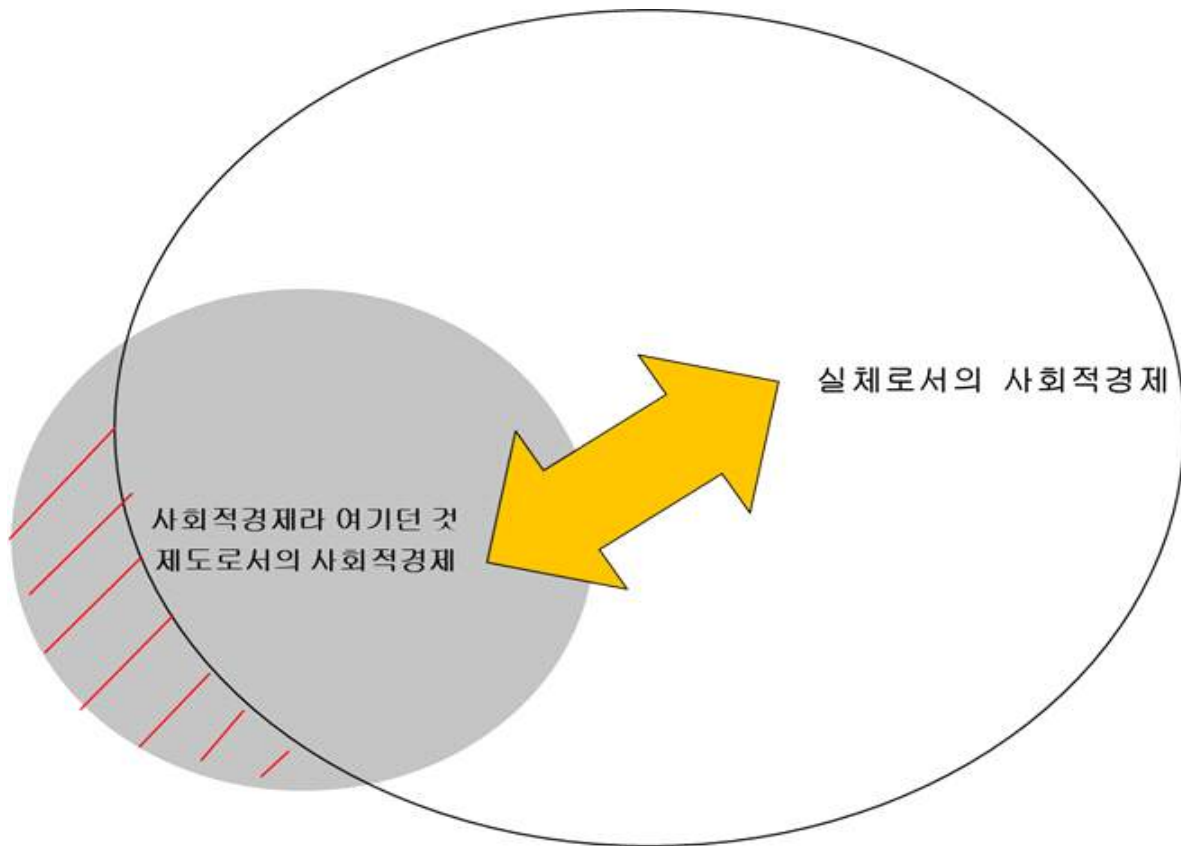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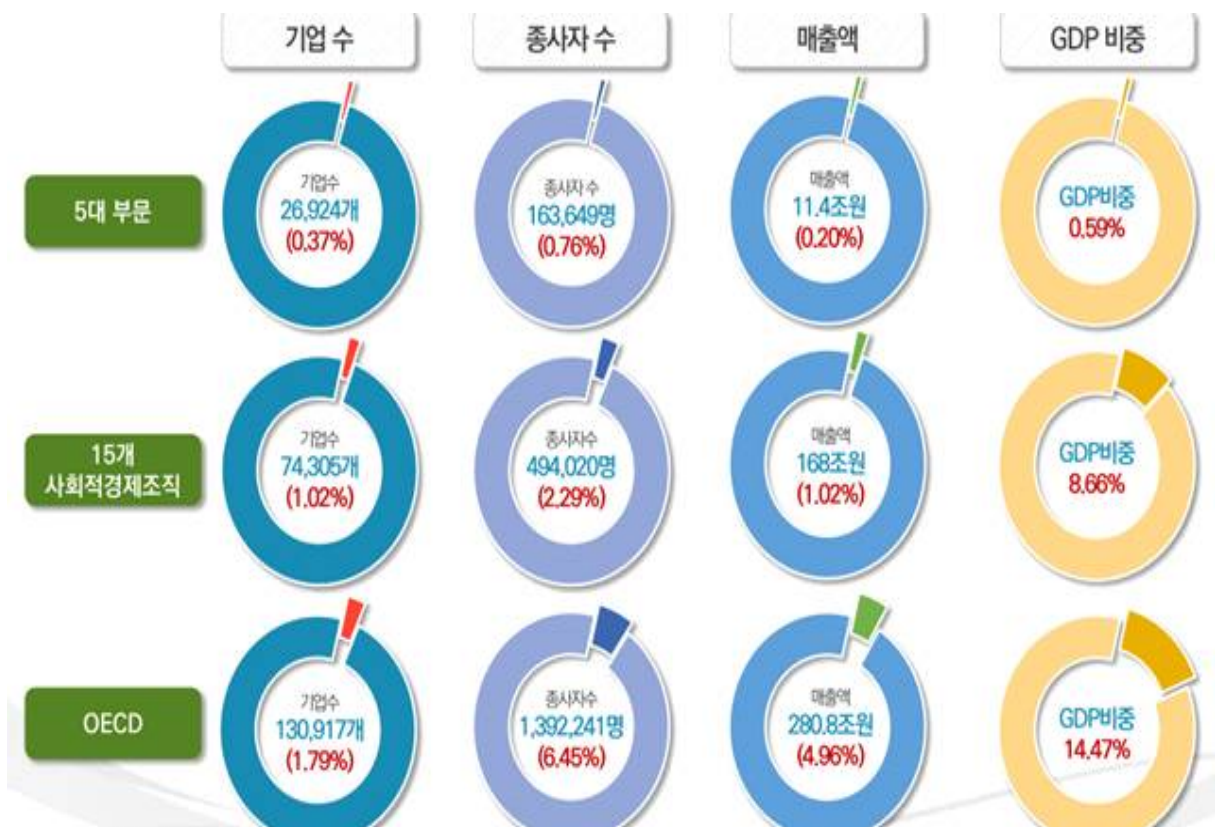
2013년, 유엔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가 발족한 이후 유엔은 공식 용어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사용

물론, 용어만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

오히려 우리의 경우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성, 민주성, 연대성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와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음



2020년 기준 전체 GDP에서 사회적경제비중



출처 : 한국의 사회적경제현황 및 성장 과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



첫째, 만들어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돕는 사회적경제방식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가점제도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시장상황이 어려워니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특질을 연구하는 사람과 기관을 늘려야 한다. 주식회사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통해 주식회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렇지 않다. 민간연구기관을 만들고 지난 20년 성장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대학과 사회적경제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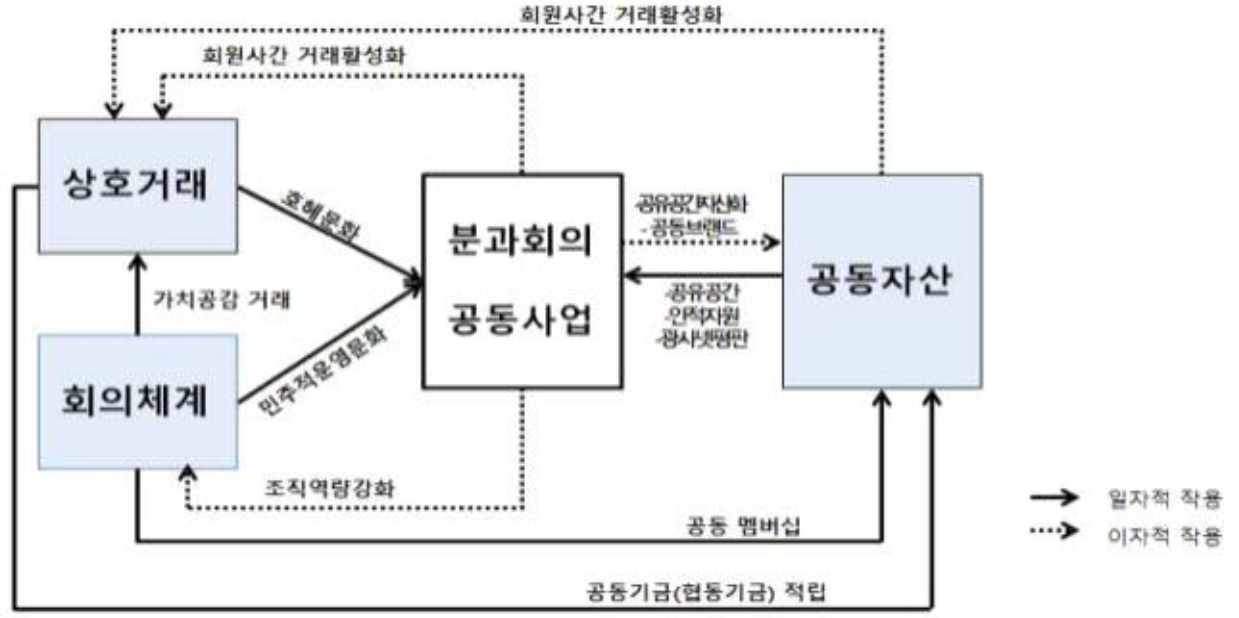
셋째, 새로운 세대가 사회적경제분야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으로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 우리 방식의 창업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업종이나 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신과 함께 할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굳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숫자를 많이 늘릴 필요도 없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경제 6단체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장과 주식회사기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늘 필요한 것이고 정부의 개입이 기존 사회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에 쓰여 져야 한다는 주장을 게을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연결하는 자조금융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자금 수요가 있고 동시에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경제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금융은 늘 언제나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02 Ⅱ.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협동의 지역사회

협력의 장치/제도 간 상호의존관계도



출처 : 시민적 협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 :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협력 경험을 중심으로 (이은주)

02 Ⅱ.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사례

더센몰 3월 3일 오픈



<https://www.coniaworld.com/seoulcoop>

02

II. 사회적경제 정책

대응방향 - 원칙을 경영적으로 구현

협동조합의 상호거래와 협업 성과: 공유공간 매입 추진



출처 :협동조합의 상호거래와협업성과(이원표)

마치며 함께 생각해 볼 질문과 과제

03

대전환을 위한 질문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경제에게 필요한 질문

1. 21세기에도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운동이 필요한가?

- 인간은 사회 속에서 경쟁과 협동하지만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 정말 그런가? 만약, 경쟁이 인간사회의 본질이라면 협동운동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2. 사회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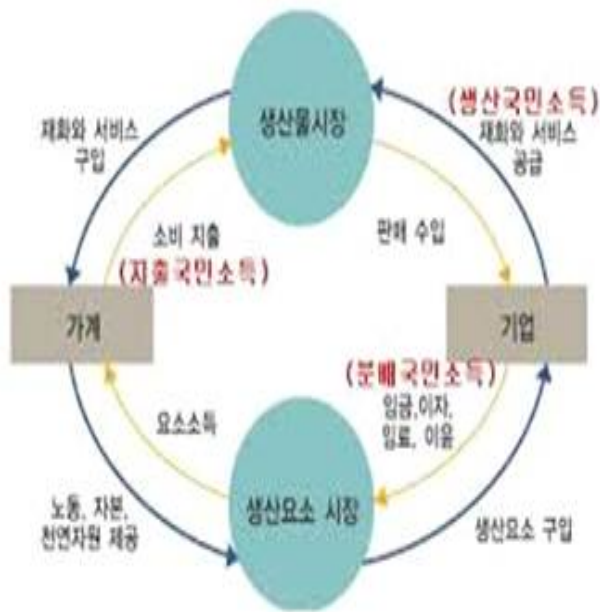
-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는 언제, 어떻게 출현했을까?
- 지구의 역사에서 대략 5억 가지의 대형 종(種, species)이 출현했고 이중 오직 17개 종만이 발달된 사회를 이루고 산다.
- 어떻게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었을까?
- 도대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3. 인류세의 인간, 우리의 삶은 지속가능한가?

-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속가능한가?
- 역사는 끝났다. 과연 자본주의 너머의 시대는 존재하는가?
- 만약,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안은 있는가?

0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

지구(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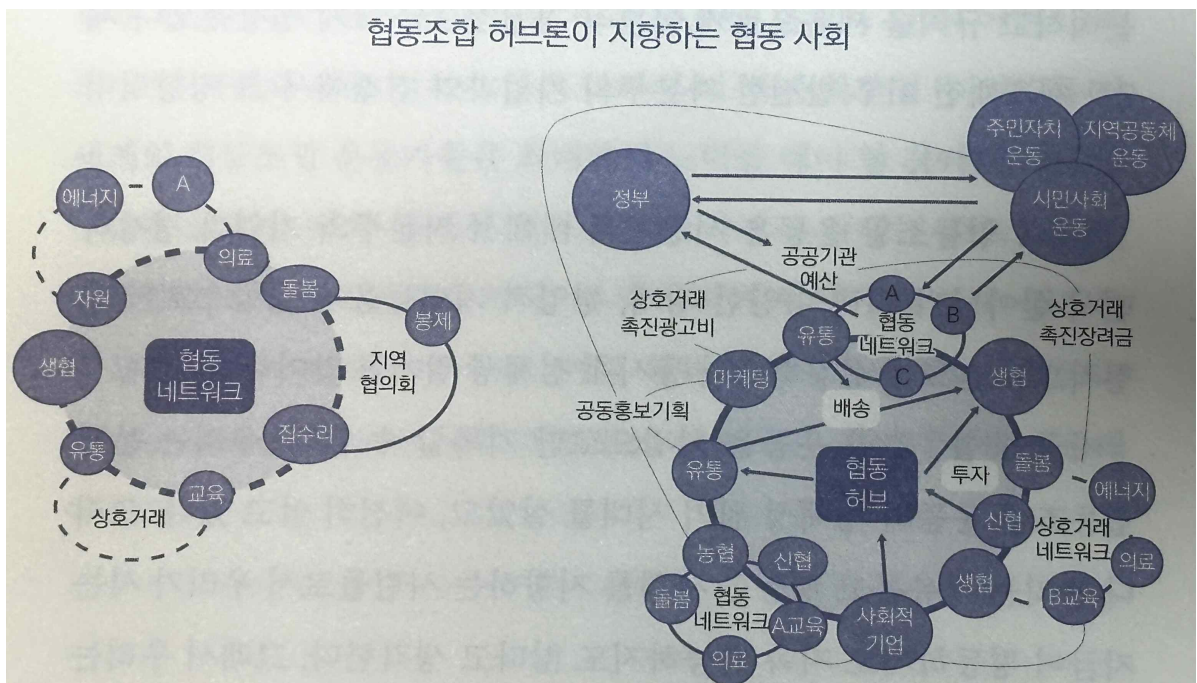
허먼데일리, 성장을 넘어서

인간과 지구의 공존을 다룬 '도넛 경제학'



케이트 에이윈스 옥스퍼드대 교수의 저서 '도넛 경제학'

협동조합 허브론이 지향하는 협동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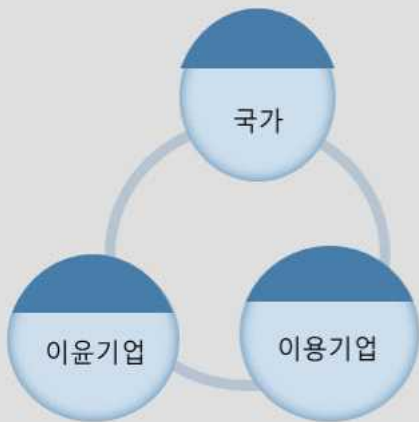
출처: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

20세기 복지국가모델 역시 확장적 경제모델에 기반했던 화석연료 시대 성장 의존형 경제모델이었음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성장 아닌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국가, 시장,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고려하면서 전체 경제 내 공공이 책임지는 비중을 늘리고 현재 과도하게 큰 이윤이 목적인 기업들의 거래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공동체(어소시에이션, 협동조합, 커먼즈)에 의한 이윤이 목적인 거래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함

03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미션과 비전

한국 사회적경제의 미션과 역할



(미션) 국가와 이윤기업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배태된 경제의 기능(본래 시장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시적 혁신자가 되어야 함

(역할) 거시적 혁신자로서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가 처한 불평등(자산/소득),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며,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는 '사회적 접착제'가 되어야 함

(과제) 공동체(어소시에이션, 협동조합, 커먼즈)에 의한 이윤이 목적인 거래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함

Question & Answer 질의 | 응답



< 부 록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대책위원회> 제안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 토론회 및 공동행동 제안(초)

공동대책위원회 핵심 요구안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제안문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절박한 활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 구성원 전체가 아닌 밤중에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기업도 받아주지 않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회적기업에게 한시적인 인건비 보상은 일반 기업의 원리와 맞지 않다면서 신규 보상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며 2년 한시 고용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시군구의 현장을 밤낮으로 뛰어 다니던 500여명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은 중간지원조직 예산 전액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2만5천여 협동조합에게 배정된 70억여원 정도의 알량한 최소한의 예산도 9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산림청, 중기부, 행안부... 이런 식의 폭력적인 예산 삭감은 지난 수십 년의 국가예산 수립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IMF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폭력적 삭감에 대해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어떤 협의와 조정도 없었습니다. 예산 삭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불과 몇 개월 전에 자랑하던 사회적기업을 세금을 훔치는 도둑으로, 자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매도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열심히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업에 여념없었던 기업인들과 종사자,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황당해 하다가 점차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어떻게든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멸해 가는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더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여 저출생노령화를 막아내고 있는 사회 문제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던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동이 지속되도록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분노를, 현장의 피터지는 요구에 대답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원칙은 "협동과 연대"입니다. 각각 움직이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행동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4년 예산의 희생자이며, 우리 모두가 공동행동의 주체입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반드시 사회적경제 예산의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합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연대조직 뿐만 아니라 개별단체, 지역, 사회적경제 구성원 개개인들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 선언 및 결의문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은 공대위로 뚝뚝 뭉쳐,
최대한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원칙, 비민주적으로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 시킬 것이다.

우리는 경악했다.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안은 수백 명의 일자리를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고 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수천 수만 명의 취약계층들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고 다시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20여년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혁신과 분투의 과정을 마치 세금이나 빼 먹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자존심을 걸고 저항하려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치고, 정부가 재를 뿌린 사회적경제의 이미지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우리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민관협치의 정신도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시킨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예산 복구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짓밟은 사회적경제의 명예를 회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과 함께 더 큰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산 원상복구는 첫 단추를 함께 끼는 우리 모두의 주장이며, 국회와 정부를 향한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사회적경제인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비난이나 폭력적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에서 약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대응,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최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뤄낼 것이다. 나부터 먼저 최소 100명의 국민에게 공대위의 취지를 설명한다.
- 하나, 우리는 우리 결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1인당 1일 이상의 1인 시위를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하나, 우리는 국회가 이번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원상복구를 강력 요청한다.

민생살림 예산 패키지 토론회 및 공동행동 제안(초)

제안: 사경 예산원상복구 실행위원회

1. 상황인식

- 민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며,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관련된 예산을 “민생살림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많은 영역에서 민생살림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총선용 토목예산을 증액하는 등 국가 및 민생의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특히 사회적경제(최대 92% 감액), R&D(초유의 10% 감액), 지방교부금(최대 40조 이상 감액), 여성, 아동예산 등을 삭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기초과학, 아동 등 국가 미래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이후의 공공적 삶의 전망까지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24년 예산안에 분노하고, 각 부문의 활동을 통해 예산을 복구하거나 일부 증액하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음
-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삭감된 예산의 증액은 국회 내의 강한 합의 및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됨

2.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공동행동 필요성

- 각 영역의 개별적 예산 원상복구 활동은 위의 상황에 비쳐볼 때 쉽지 않음. 따라서 정부에 대해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민간의 요구 주장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동행동이 필요함
- 민생살림예산 패키지를 24년 예산에서 가장 피해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들이 합의하여 제안함으로써 국회의 증액 및 원상복구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공동행동을 통한 동일한 주장을 펼치면 전국민적 관심을 끌어 내는 데 용이할 것임
- 총선을 4개월 앞둔 12월 상황에서 여당에게도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합의가 원활하게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3. 공동행동 제안 사항

- ☑ 11월초 공동토론회 개최
- ☑ 공동행동 활동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주요 시점에 2~3회)
- ☑ 여야 당대표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공동 전달
- ☑ 각 영역의 예산활동에 대한 상호 지원 및 상호 홍보

11월초 공동토론회

- 시기 : 정부 세부예산안 국회 전달 후 10일 이내
- 주최 : 사경연대 등 공대위 참여단체, 자치분권운동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여성, 아동 관련 단체, 알앤디 대표 활동 단체 등 예산삭감 관련 직접 피해 및 활동 진행 단체들을 포괄
- 내용 : 세부예산안에 나타난 각 부문 문제점 주장
민생살림예산패키지 정리 및 일괄 통과 주장
민생살림 외면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원상복구 권고
- 준비사항 : 10월말 관련 단체 공동토론회 및 공동행동 제안 및 참여 결의 국회를 통해 세부예산안 조속히 확보 및 각자 분석
(행정에서 넘어오는 날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작업
 - 참여 각 부문 연구책임자 워크숍 통해 초안 작성
(세부예산 확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대표자 모여서 초안 합의(4일 이내+토론회 확정)국회 공동토론회 준비 실무 진행 **(역할 분담): 조직/홍보팀 협력**

공동행동 활동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시기 : 1회 : 공동토론회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
2회 : 예결위 일정 보면서 결정
3회 :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선정
- 내용 : 1회 이후 2~3회는 상황을 추적하면서 협의하여 내용 생산

여야 당대표 민생살림예산 패키지 전달

□ 사회적경제 예산 증액 관련 핵심 요구

- 사회적경제 예산 중 민간의 자구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 취약계층 고용, 생산적 복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성 보장 등 국가가 해야 할 책무와 관련된 영역의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 요구하는 것임. 취약계층의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과 지역소멸 우려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양적, 질적 확대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시도별 중간지원조직 관련 예산도 △300명 이상의 전문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 사경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신규 인증 및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년 동안 기존 정책을 신뢰하며 준비해 온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의 발전과 성장이 단절될 수 있음. 이는 고용부 3개 계정과 행안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기재부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은 2만5천여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75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다른 국가 정책에 비해 볼 때 상당히 미약한 수준임에도 7억8천만원으로 90% 이상 삭감하여 민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기존 예산을 모두 복구해도 여전히 부족함.
- 이 요구안은 1년 가까이 민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관계부처의 2024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한 것임. 6천억 이상 삭감된 것 중 총액 1천억원 정도 24년 정부 예산 편성안에 추가되는 것으로, 4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국가예산 편성이 될 것임.

<사회적경제 요구증액>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안	요구 증액	관련 상임위원회 및 부처
총 계	216,667	82,099	179,380	97,278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외	202,194	78,624	165,689	87,062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활성화사업	7,508	780	6,726	5,946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육성사업	6,965	2,695	6,965	4,270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단위 : 백만원)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안	요구증 액	예산 코드	증액 사유 및 비고
합계	202,194	78,624	165,689	87,065		
사회적기업 지원	69,259	28,589	59,974	31,385	1037-311	
시도지원기관 운영	4,222	0	4,222	4,222	1037-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은 그 간 예비 지정, 인증,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제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음. 해당 기관 직원은 10여 년의 지원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도 축적되어 있음. ○ 이 항목이 삭감된다면 3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기재부 협동조합지원기관 예산 포함), 그 간 축적된 유무형의 지원 시스템은 붕괴될 것임. 이는 내년에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키기 어려운 것으로서 반드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청년등사회적 기업가육성	41,192	4,670	41,192	36,522	1037-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세목 사업의 하나로서 그 동안 청년 등의 다양한 초기 사회적기업가들에 대한 교육, 신규 기업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첫 진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인증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나 플랫폼기업가의 양성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음.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의 대표 사업으로 평가됨. ○ 이 사업이 없어지면 사회적기업가의 체계적 육성이 중단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짐. 또한 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시도별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뿌리없는 나무를 키우는 것에 불과함. 반대로 유지되면 청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가 육성과 기업설립 및 운영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8,817	4,938	7,222	2,284	1037-311	
사 회 적 기 업 (지특)	103,377	47,665	82,528	34,863	1037-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으로서, 현재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및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지원을 배제한 조건으로 24년도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음. 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게 됨.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준수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가의 의욕을 지속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재정사업이 유지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와 원활한 사회 재진입 기대
사회적기업 육성	24,621	0	18,887	18,887	1037-301	
사회적기업 (지특제주)	4,937	2,370	4,300	1,930	1037-313	

<협동조합활성화사업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 안	요구 증액	예산 코드	증액 사유 및 비고
총계	7,508	780	6,726	5,946	1331-302	
교육	866	150	850	700	1331-30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가 수립한 법정계획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제 중 한 분야로 증액 필수 (총1,000백만원) * 주요 핵심사업: 협동조합 교육훈련사업, 전문상시상담, 경영공시 및 총회교육, 온라인교육,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 교육
홍보	260	110	140	30	1331-30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정 수준의 예산편성 필수 (총250백만원) * 주요 핵심사업: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대국민 협동조합 인식증진, 홍보사업 등
설립운영 지원	4,709	240	4,760	4,520	1331-302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현 정부가 수립한 법정계획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제 중 한 분야로 증액 필수 (총5,000백만원) * 주요 핵심사업: 내실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자생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지원사업, 협동조합 전문 지원기관 운영 등
정책개발	210	0	250	250	1331-302	협동조합의 성숙을 위한 제도정비 및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일정 수준의 예산편성 필수 (총250백만원)
종합정보 시스템	370	253	253	0	1331-302	협동조합 정책운영 및 현황, 정책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개선, 운영비로 일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현 예산(안) 유지)
기타 사업비	1,093	27	473	446	1331-302	이미 개최지(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선정을 완료한 2024년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지원예산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총500백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구분	23 본예산	24 예산안	조정 안	요구 증액	예산 코드	증액 사유 및 비고
총계	6,965	2,695	6,965	4,270	3131-301	마을기업육성사업 24년도 예산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 관련 예산이 제외되어 있음.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270	0	270	270	3131-301	이는 최소 1년 최대 3~4년 동안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준비해 온 지방소멸 지역 및 기타 주민 주도 마을기업 희망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순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6,695	2,695	6,695	4,000	3131-301	적인 정비가 필요함. 24년 예산을 복구한 후 점차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나는 희망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